
	보 도 반 박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6.4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 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제 목 : 가계부채 여론조사 관련, 금융위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조사결과만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[한국일보 6.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

1. 기사 내용

- ☐ 한국일보는 6.4일자 “금융위, LTV 개선책 놓고 유리한 여론조사만 공개... ‘정책 투명성 결여’ 지적”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설문조사의 유불리를 따져 일부 결과만 공개한 것을 두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”고 언급하며,
 - LTV +10%p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무주택·실수요자 요건 관련 “연소득 기준,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유지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에도”,
 - “83.7%의 응답자가 무주택 서민·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 10% 추가혜택 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”했다는 유리한 여론조사만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/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현행 대출규제의 적절성 및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* (설문시기) 2.24~3.5일 (설문대상) 일반국민 600인, 전문가 120인
- 설문은 전문가 대상으로 27개, 일반국민 대상으로 20개,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(일부문항은 전문가·일반인 중복)

- 금번 설문과 관련하여, 서민·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와 같이 여러 항목*이 작용하는 설문은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"①무주택·실수요자 제도 확대 필요성"에는 여러가지 하위항목(②소득요건, ③주택가격, ④우대혜택 폭)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복합적으로 고려됨

서민·실수요자 우대혜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요약

	전문가(120인)	일반국민(600인)
①무주택·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 필요성	84.6%	83.6%
②소득요건(8천만원) 적절성	32.5%	56.9%
적절한 소득요건	1.3억원 이상 45.8% 1.2억원 25.3% 1억원 20.5% 順	8천만원 이하 : 48.1% 1억원 : 26.0% 1.3억원 이상 : 9.5% 順
③주택가격(6억원) 적절성	23.6%	59.4%
적절한 주택가격	10억원 35.1% 9억원 31.9% 12억원 이상 20.2% 順	6억원 이하 : 32.0% 10억원 25.5% 12억원 이상 : 14.6% 順
④LTV 우대폭 10%의 적절성	34.1%	55.9%
적절한 우대혜택 폭	+30% : 30.9% +20% : 28.4% +40% : 17.3% 順	+30% : 39.2% +40% : 22.4% +20% : 14.6% 順

※ (참고) '한국일보'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는 일반국민의 응답결과에 국한됨

- 위 설문결과를 보듯이, 전문가·일반인 모두 무주택·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%를 초과*했으나,

* 통상 여론조사에서 특정 부문에 대해 80% 이상의 긍정답변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임

-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전문가/일반인 별로 차이*가 나며, 우대혜택의 세부요건(②, ③, ④) 별로도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합니다.

* 전문가 의견은 일반인과는 달리, 현행 주택가격·소득 기준이 적절하지 않고(주택 가격 부적절 76.4%, 소득 기준 부적절 67.5%) 확대되어야 한다는 비중이 매우 높음

- 따라서, 우대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압도적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, 개별 항목별로는 현행유지가 적절하다는 비중이 높을수도 있습니다.

- 이러한 이유로, 총괄 질문에 뒤따르는 개별 항목의 결과에 국한하여 '무주택자 대출규제 개선'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.

- 동 기사의 지적대로 개별요소에 대한 적절/부적절 여부를 평가하여 전체 정책의 방향성을 판단할 경우,
 - 개별적으로는 ①소득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되며, ②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도 안되고, ③LTV 우대폭을 확대해도 안된다는 여론이 다소 높게 나오면서도,
 - 총괄적으로는 무주택·실수요자 우대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답변(83.6%)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와 상충되게 됩니다.
- 이처럼 설문조사는 과학적 통계 데이터와 달리, 응답과정에서 주관성이 작용하여 응답결과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,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따름입니다.
-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, 지난 「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위 논의내용*」 발표(5.13일)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면서,

※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위원들 주요 발언(5.13일 보도자료 배포)

- 서민·실수요자 LTV 우대조치의 소득·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
-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에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도 왜곡

- 국민이 생각하는 대출규제에 대한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, 47개 설문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며,
- 기사의 지적처럼 응답결과의 유효리를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.
- 금번 서민·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는, 다주택·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DSR의 단계적 확대*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주택·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,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 내용입니다.

* 4.29일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에서 '23.7월까지의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계획 제시

- 구체적인 요건은, '17년(6.19 주택시장 안정방안)에 최초로 설정한 주택 가격, 소득기준을 그동안의 상승분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무주택자 우대혜택 소득요건, 주택가격 기준(투기지역 기준)

	최초도입('17.6월)	현재
소득요건 (부부합산)	7천만원 : 상위 26.8%*	7천만원 : 상위 46.1% → 9천만원 : 상위 29.0%('21.3월 기준)
주택가격 기준	6억원 : 상위 43.0% (서울 APT 기준)	6억원 : 상위 86.6% → 9억원 : 상위 59.0%('21.5월 기준) (서울 APT 기준)

*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'20.6월 한차례 조정하였음(7천만원 → 8천만원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